

**“평화를 위한 경제, 경제를 위한 평화”
남북경협비용 어떻게 볼 것인가 ?**

2005. 11.



통 일 부

MINISTRY OF UNIFICATION

교 류 협 력 국

목 차

1. 우리가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이유는 ?
2. 그동안 남북경협의 성과는 무엇인가 ?
3. 그동안 남북경협비용은 얼마인가 ?
4. 남북경협비용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?
5. 남북경협의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?
6. 남북경협비용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가 ?
7. 남북경협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?

1. 우리가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이유는 ?

□ 남북경협의 장기적 목표는 남북경제공동체 실현

- 당면하여 3대 경협사업(개성공단 건설, 철도-도로연결사업, 금강산관광사업)을 심화·확대
 - 점차 호혜적인 산업협력을 확대, △농업·경공업·지하자원·수산업 등 협력 추진 △교통·물류, 에너지, 통신 등 SOC협력을 통해 산업협력의 기반 마련 및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·지원 →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
 - 중장기적으로 공동시장과 통화통합을 포함한 제도적 경제통합 달성
- ⇒ APEC의 투자·무역자유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전에 남북경제공동체를 완성,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

□ 경협은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증진의 기초 : “평화를 위한 경제”

- 경협은 △남북간 정치적 신뢰구축 △군사적 긴장완화 △인적 접촉 증대 △남북 상호보완적 협력을 촉진
- 아울러 북한의 △경제난에 의한 한반도의 위기 감소 △대남적대감 해소 △경협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견인

□ 한반도 평화는 경제발전의 필수요소 : “경제를 위한 평화”

-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통해 country risk 감소, 대외신인도 제고
- 북방시장 개척을 통해 新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강화 →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

2. 그동안 남북경협의 성과는 무엇인가 ?

□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견인

○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

- 남북대화의 지속을 통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

6.15이후 남북회담	정치	군사	경제	인도·체육	계
횟수	27	34	60	27	148

○ 철도·도로 연결, 개성공단 건설·금강산 관광 (3대 경협사업), 남북협력 특구 설정, MDL-DMZ 일부 개방

○ 남북 인적교류(왕래) 대폭적 증대

- 금년에 85,000여명의 인원이 남북을 왕래, 지난 16년간 왕래인원과 같은 규모, 동서 연결도로를 통해 일 300여대의 차량 왕래

왕래 인원	89~97	1998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	합계 (‘89~’04)	2005*
인 원 (명)	2,980	3,317	5,661	7,986	8,742	13,877	16,303	26,534	85,400	85,000 (예상) 71,967 (10월 현재)

* 금강산 관광객(’98~’05.10) : 1,129,033명

○ 교역 규모·해상 물동량·차량운행 등 물적 교류의 증대

- 남북간 교역액은 금년들어 연 10억불을 돌파할 전망, 이는 북한 전체 교역액의 1/3에 해당

교역액	89~97	1998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	합계 (‘89~’04)	2005
금 액 (억달러)	15.5	2.2	3.3	4.2	4	6.4	7.2	6.9	49.7	10 (예상) 8.7 (10월 현재)

□ 북한의 변화 유도

○ 북한주민들의 인식변화

- 대남인식 변화 : △대남 적대감 완화 △남측의 발전상 인정 △식량지원에 대한 고마움 표시
- 자본주의적 사고 확산
 - * 시장친화적 마인드(에너지, 쌀 등 상거래 흥정), 경쟁인식, 화폐 증시

○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요소 도입

- 시장기능의 공식적 활용·강화
 - * '03.3 김정일의 지시로 시장을 공식 인정, 평양시(40개)를 비롯, 북측 전역에 300여개의 「종합시장」 조성 추진
- 자율확대와 실리 중심으로 경제운용방식 전환
 - * 농촌관리방식 변화(자율처분권 확대, 현금 실적분배 등), 공장기업소의 경영자율권 확대, 공채 판매 및 초보적 세금 징수 등

○ 군부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

- 경협 관련 군사당국간 실질 협력 증대, 경제건설 사업에 군을 대대적으로 동원

○ 법적·제도적 장치 등 시스템의 변화

- 남북경협의 중요성 인식, 대남 경협을 위한 법제·조직 정비
 - * 「북남경제협력법」 제정(7.6),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(민경협) 설립, 남측대상 투자설명회 개최(10.1), 경협협의사무소 개설(10.28)
- 외자유치를 위해 「경제특구」 지정 및 대외개방 확대 모색

□ 우리경제에 긍정 기여

○ 국가신인도 제고, country risk 감소

- * 피치사, 10월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유로 신용등급 상향(A→ A⁺)

○ 해외 투자유인, 경제의 안정적 발전토대 제공

3. 그동안 남북경협비용은 얼마인가 ?

□ 15년간 순수 남북경협비용은 7천 5백억원(연평균 5백억)

- 경협기반사업은 15년간 남북협력기금 2조 6천억원의 29%

* 경협기반 29%, 식량·비료지원 65%, 기타 6%

- 대북지원은 '95년-'04년 9년간 1조 3,012억원을 지원,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은 2,710원 (2.5\$)

□ '04년 남북교류협력 비용은 약 4,300억으로 GNI(국민총소득) 780조의 0.055% 수준

- 이는 '04년 ODA(공적개발원조) 4.2억불(GNI의 0.06%) 과 비슷한 규모

□ 남북협력기금의 60%이상이 식량·비료지원에 집중, 개발성 경협사업은 27%에 불과

< 남북협력기금 사용내역(1991~2005.12) >

주요사용처	식 량	비 료	철도·도로	경협지원·용자	기 타	계
투자액	1조 484억	6,218억	5,753억	1,758억	3,466억	2조 7,679억

4. 남북경협비용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?

□ 남북경협비용은 「평화비용」, 「통일촉진비용」, 「통일준비비용」으로서 소모성 비용이 아닌 “평화와 미래를 위한 투자”

□ 평화 비용

- 인도적 대북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반도 평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
- 남북경협은 남북간 협력수준 향상,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 약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
- 「9.19 공동성명」에 따른 에너지 제공은 핵폐기 등 한반도 평화 위해 요인을 직접 해소

□ 통일비용

- 남북경협은 장차 통일을 촉진하고, 통일과정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「통일촉진비용」 내지 「통일준비비용」
- 남북경협은 민족공동체 형성 및 남북간 경제적 통합을 앞당김으로써 통일을 촉진
-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발전 및 개혁·개방, 남북 경제력 격차 축소 등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통일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

5. 남북경협의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?

□ 한반도 평화증진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

-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증진을 통해 우리의 경제환경을 개선, 국가신인도 제고 및 country risk(국가 위험도) 감소에 기여
 - country risk 감소는 △해외자금 조달비용 절감, △국가자산가치 증대, △해외자금 유입 규모 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 유발

□ 先투자를 통해 장차의 막대한 통일비용을 경감

- 북한경제가 자생력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
 - * 독일은 통독이후 15년간 약 1조 2,500억유로(1,500조), 연평균 833억유로(100조)를 통일비용으로 지출
- 대북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남북경협은 장차 통일 및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에 대비한 先투자로서의 의미

□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선점

- 북방투자(남북경협)는 우리경제에 있어 '블루오션'
 - 북한경제 개발과정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게 되면, 북한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, 우리경제에도 새로운 돌파구
 - 남북경협 활성화시 북한을 중계거점으로 하는 중국·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심화·발전됨으로써 '북방경제 시대' 도래
- 남북경협은 외국에 앞서 북한에 먼저 진출하는 전략적 측면도 고려
 - 서독도 통일이전 대동독 지원을 통해 다른 서유럽 국가들이 서독에 앞서 동독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는 것을 방지
 - * 서독은 '73-'90년(18년)간 대동독 지원에 연평균 32억불(3조 2천억원) 투입

6. 남북경협비용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가 ?

- 남북경협비용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없음.
- 향후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guide-line 설정이 필요

참고 사례	내 용
독일통일 비용	○ 연평균 833억 유로(100조원)
국제사회 대외원조 비용	○ UN의 선진국 ODA 지출권고 - GNI의 0.7%(한국 5조 5,000억원)
EU 회원국 분담금	○ '04년 EU 25개 회원국은 827억유로 분담 (평균 40억\$)
우리정부 예산	○ 총예산 : 134조 3704억원 - 국방예산 : 20조 8226억원 - 교육예산 : 25조 8591억원 - 복지예산 : 15조 7218억원

- 다만, 구체적 남북경협비용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정 및 주변여건을 보아가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정

7. 남북경협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?

- 남북경협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모두 뒷받침하는 것은 불가능
 - 핵문제가 해결되고 국제환경이 개선되면
 - 북한 스스로가 경제발전을 주로 해야 하며, 그 과정에서 북한이 민자와 외자를 유치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
- 민간자금은 수익성이 있어야 유입
 - 현 단계에서는 정부재정으로 지원, 남북경협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장차 민간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
 - 북핵 폐기 이후 단계에서는 민간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
- 북핵 폐기 이후에는 IBRD·ADB 개발자금, 선진국의 ODA 자금, 상업차관, Project Financing, 내외국인 직접 투자 등 다양한 방안 강구
 - 재정은 보완적 기능 수행